

주제1 토론문 : 북핵 23년의 참회록과 대응

조영기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회장

박휘락 교수님의 “북핵위협에 따른 국방개혁과 한미연합태세의 조정 방향”에 대한 발제문 잘 읽었습니다. 국방최고의 전문가답게 논리 정연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핵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도자들과 국방·안보 책임자들이 핵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나 지도자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독재자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함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북한이 5차 핵 실험을 한 지금도 북핵은 대미협상용이라고 오판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인 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근본적 이유는 ‘핵을 앞세워 한국을 흡수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와 대화, 협력’이라는 미사여구로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지도자의 발언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설사 북한이 2~3개의 핵폭탄을 가졌다한들 2만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쓸모가 없을 것이다.”(1994.5),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2001년)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가 자위적 수단이라는 데 일리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04.11),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2006.12)¹⁾

1) 주간조선, “북핵 키운 23년의 그 목소리들”, 주간조선 2425호, 2016.9.26.

이처럼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너무도 안이했습니다. 이제 핵개발 23년에 대해 ‘참회(懺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참회란 ‘자신이 범한 죄나 과오를 깨닫고 뉘우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을 정조준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중국이 북한 압박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참회의 출발은 **실종된 대한민국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강(自強)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박 교수님이 발제문에서 밝힌 것처럼 역대정부의 국방개혁은 북핵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이 빠진 국방개혁은 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금년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서 핵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에 성공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면 50~100개의 핵탄두를 실전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핵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대응조치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재래식 무기의존 패러다임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핵의 노림수는 ‘미국이 워싱턴이나 샌프란시스코를 수호하기 위해 서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하면서 핵질주에 집착하는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김정운의 핵 야욕을 잠재울 새로운 전략방향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로 기존의 재래식 무기의존 자강패러다임을 비대칭무기 중심의 자강패러다임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한국의 핵무장이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만 안보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안보이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보·국방전략의 핵심은 자강(自強)과 동맹(同盟)입니다. 물론 국가안보의 1차적 책임은 자국에 있다는 측면에서 자강이 동맹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강이란 ‘적어도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이익보다 손실이 많은 것을 확실히 알릴 정도의 국방능력을 구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정수준의 국방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능력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의 직·간접

적 위협과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비대칭무기에 대한 자강능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자강은 1차적으로 자주적 방위능력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적 방위능력은 현대적 군비를 확충하는 ‘군사전략적 자강’뿐만 아니라 군 장병의 정신력과 국민의 단합된 힘인 ‘정신 전략적 자강’이 결합되어야만 상승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강은 국방·안보부서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힘이 결집된 결과물입니다. 한편 자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맹도 없고 이웃 국가의 동조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강은 필수요소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부족한 자강능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권확장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보다는 한미동맹의 ‘불편함’ 또는 ‘비용’을 과대 포장해 온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물론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과 일본에 의한 지역패권경쟁을 제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미래의 전략적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굳건한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동맹에만 의존하려는 나쁜 타성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국방·안보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국방인력들의 동맹의존 타성은 자강에 위해(危害) 요소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맹의존 타성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군인으로 변질시켜 상무정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군인들에게 부여한 1차적 임무는 전쟁준비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보다 평화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상무정신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신’입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폐기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의 체제붕괴(system collapse)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재국가 내지 공산주의 국가들이 체제붕괴의 상황에 직면했는가 북한체제붕괴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체제를 지탱해 온 사상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체제의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위기와 핵심계층과 주민들간의 극심한 양극화, 외부정보유입이 체제를 붕괴시키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이 요소들은 김정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초래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국의 비협조로 구조적 허점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미중의 전략적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하였고 6차 7차 핵실험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된 근원은 대한민국이 비대칭적 자강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비대칭적 자강능력 확보는 대만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one-China)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응태도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외부정보유입은 우리의 결심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는 사상해방, 양극화 실상공개 등이 공개되면 김정은과 주민을 분리시키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민주화의 싹을 틔우는 통일대비 전략입니다.